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1. 6.

금 융 위 원 회

1.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(안 제14조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(49인 → 100인)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기준을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개정(산정방법은 기존과 동일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보유한 전문·적격투자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어,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 구축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 관련자에 대한 동일 금융투자업 재진입 제한 [안 제21조제5항~제7항, 안 제271조의2제5항, 제8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계속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등록(투자일임·자문업, 일반 사모집합투자업)의 직권말소 도입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투자업 등록이 말소된 업자의 본인, 임원, 대주주인 사실을 동일한 금융투자업 등록에 관하여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결격사유에 추가(해당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간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투자업 등록 직권말소와 함께 등록 금융투자업자의 충실한 영업을 유도하고 부실 관련자 등의 업계 퇴출을 촉진하여 건전한 투자일임·자문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사모펀드 제도 개편 관련 투자매매·중개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[안 제68조제2항제5호, 제68조제5항제2호의3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업 인수합병 관련 업무가 대표적인 기업금융업무로 인식되면서, 인수합병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업무도 “기업금융업무” 중 하나로 포함

*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한(법 제71조제3호)

-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, 사모펀드 유형과 무관하게 M&A 주체로 참여할 펀드의 운용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 인정할 필요

- 사모펀드 판매설명자료로 법상 “핵심상품설명서”(법 제249조의4제2항)가 도입됨에 따라,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를 “핵심상품설명서”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경영참여 전략을 택한 사모펀드의 운용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 정의

<< 경영 참여 방식 운용 방법(법 제249조의7제5항 제1호·제2호) >>

1.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% 이상을 보유
2.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(시행령에서 구체화)

-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내용, 투자위험 등의 사항을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중이나,

-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시에는 법상 “핵심상품설명서”를 교부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인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업금융업무* 범위를 합리화하고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시 별도 설명서를 대체하여 “핵심상품설명서” 교부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,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시 실무상 혼란 최소화

*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(영 제43조제5항제4호,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업무)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되는 효과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사모재간접펀드, 부동산·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인 사모펀드 범위 명확화 (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, 제5호의3, 제8호의3, 제8호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완화되고 분류 역시 운용 방식이 아닌 투자자 범위를 기준으로 개편(일반/기관전용)됨에 따라,
 - 사모재간접펀드/부동산·특별자산재간접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 범위를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모재간접펀드/부동산·특별자산재간접펀드가 자산총액의 100% 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기존과 동일하게 재조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투자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및 실물자산 투자기회 확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5.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정비

[안 제87조제4항제1호, 제8호의6, 제8호의7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일반 사모펀드 운용업자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“핵심상품설명서”를 위반하여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
-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으로 대출시, 펀드 운용업자로서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것임에도,
 - 대주 명의를 자신이 아니라는 이유(펀드 또는 수탁회사)로 펀드 보수와 별도로 차주에게 대출 중개·주선·대리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단일 행위에 대한 이중의 대가 수취에 해당할 여지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 및 집합투자업자가 대여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모펀드의 상품 설명서와 실제 상품 내용과의 일치를 통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
- 부당한 대가 이중 수취와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투자자 및 차주 피해 방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6.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사항(투자자 정보제공 확대)

[안 제92조제3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필요(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)
 - 사모펀드는 고수익 추구를 위한 레버리지 및 만기 미스매치 구조 활용, 복층형 투자 등 적극적 운용과정에서
- 투자대상자산 및 이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반투자자가 펀드의 운용자산 현황, 투자위험의 내용 및 관리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 확대(공·사모펀드 공통)
 - ①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
 - ② 집합투자기구의 위기 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
 - 개방형 펀드에 대하여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(최소 연 1회 정례화 추진)를 실시한 경우 해당 테스트 결과 예상되는 위험을 반영
 - ③ ①~② 및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, 투자전략, 주된 투자대상 자산, 투자환경·운용계획 등으로 발생가능한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

* 복층구조, 해외재간접구조, 레버리지 구조, 만기불일치 구조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투자자의 펀드 주요 운용현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대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7. 비시장성 자산 일정 비율 이상 편입시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·설립 의무화 (안 제242조제2항제5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펀드가 사모사채·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(만기 미스매치 구조)될 경우,
 - 투자자의 상환·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우려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펀드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산(비시장성 자산)을 편입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(MMF 제외)는 환매 금지형으로 설정 의무화(공·사모펀드 공통)
 - ※ 비시장성 자산의 범위는 현행 행정지도(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, '20.8월)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방형 펀드의 만기 미스매치 구조 해소에 따라 펀드 상환·환매를 통해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8. 기준가격의 계산 방법 표준화 및 공고절차 분리(안 제262조제1항 및 제262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시행령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시 ‘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’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사모펀드는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 의무가 없어 법령상 ‘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’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
- 법 개정으로 일반 사모펀드에도 기준가격 산정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공·사모펀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가격 계산 방법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준일자(T)의 기준가격 산정시 그 기준가격 계산일(T-1)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
- 사모펀드에는 기준가격의 산정 의무만 부여되는 점을 고려, 현행 시행령(§262①)에서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조문(안 §262의2)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조문(안 §262)은 공·사모펀드 모두에 적용되고, 공고·게시에 관한 조문(안 §262의2)은 공모펀드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화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란 최소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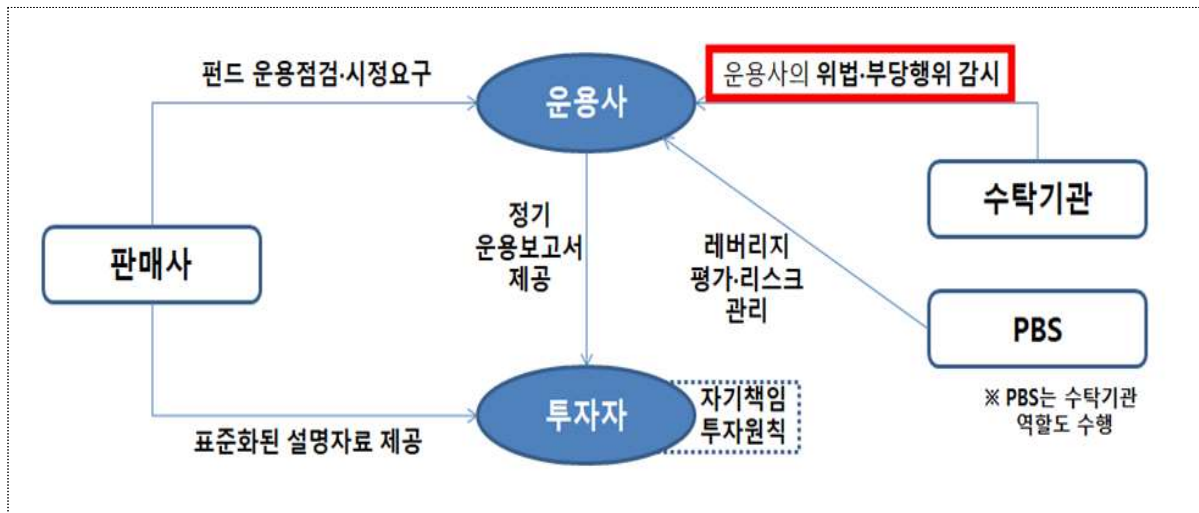
○ 없음

9.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 운용감시 업무 수행시 확인 사항 등 [안 제269조제4항제2호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,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운용감시 의무 강화(법 §249의8②5, §247)

<< 시장규율(market discipline)을 통한 사모펀드 위험 관리 체계>>



* 「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」('20.4.25) 中

- 상기 의무와 관련한 신탁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의 내용 및 이행 방법 등의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신탁업자는 운용업자(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)가 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 명세서의 내용과 신탁업자가 실제 보관·관리중인 집합투자 재산의 수량 등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시장규율을 통한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0. 판매사의 감사·견제책임 강화(안 제271조의6 제1항~제9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적격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,
 -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(또는 중요사항 발췌자료)를 사전 검증한 후 적격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도록 의무화하고,
 - 해당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문제 발견시 시정요구토록 함
- 이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및 검증·교부방법, 판매사의 운용행위 확인 및 조치요구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정의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에 따른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명서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규정
 - 단, 판매사와 운용사간 사전합의 시 투자자의 투자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만을 발췌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대체 가능
-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, 투자대상자산, 투자방침·전략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 전 검증
- 설명서는 전문투자자 및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직접,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
- 판매사는 운용사가 매분기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, 문제발견 시 변경·시정 요구
 - 운용사의 시정요구 미이행 시 금융위 보고 및 투자자 통보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판매사에게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투자권유시 사용하는 투자설명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확인 의무를 부여하여,
- 운용사의 잘못된 운용행위를 차단·예방 또는 시정조치할 수 있게 되어 적격일반투자자에 대한 사전·사후 보호장치를 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1. 투자광고의 대상 명확화(안 제271조의6 제10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광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투자자는 해당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과 동일하도록 기준을 설정

-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광고 가능 기준 :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영 제271조 제2항에 따른 금액* 이상인 경우

- * ①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이 200% 이하인 경우 3억원
- ② ① 외의 경우 : 5억원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과 투자광고 대상요건을 일치시킴으로서 사모펀드 관계기관(판매사 등)의 혼선을 방지하고,

- 일반투자자도 자격을 갖춘 자만 투자광고의 대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광고 또는 투자자 피해* 가능성을 최소화

- * 금융투자상품 잔고 조건에 미달함에도 투자광고를 수신한 일반투자자는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리한 차입을 하는 경우 등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12.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·설립 즉시 보고사항[안 제271조의9제2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설정·설립 즉시 보고사항을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했던 즉시 보고사항 사유*를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에도 그대로 적용
- *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일반 사모펀드의 100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등 5가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·설립시 즉시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3. 사모펀드의 차입·대출규제 일원화(안 제271조의10 제1항~제1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모든 사모펀드*에 대하여 펀드 순재산의 400%까지 차입을 허용하고,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금액 계산시 포함

* [현행] 전문투자형(일반) 사모펀드 : 펀드 순재산의 400% 이내
경영참여형(기관전용) 사모펀드 : 10% 이내(SPC는 자기자본의 300% 이내)

- 모든 사모펀드*에 대하여 대출 방식의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,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하던 행정지도**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

* [현행] 전문투자형(일반) 사모펀드 : 허용. 단, 개인에 대한 대출 제한
경영참여형(기관전용) 사모펀드 : 대출 방식의 영업 불가

** 「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업무 가이드라인(금융위, '16.7.26. ~)」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금액을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도금액 및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금액으로 규정

-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,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차입금액의 비율도 400% 이내로 제한

- 개인 및 유흥업·사행업종 영위자*에게 직접 대여하거나,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

-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업무 가이드라인의 내용*을 시행령에 반영

* ① 금전대여 목적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나,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·특별자산 관련인 경우 판매를 허용

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출형 사모펀드에 90%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펀드 설정·설립 불가

③ 대출형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구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실상 차입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유동성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
-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비율이 400%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운용전략 구사 가능
-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방식 영업이 허용되어 기업대출,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한 성장자본 공급기능 활성화
 - 다만, 행정지도로 규율하던 개인 대출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예방에 기여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4.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(안 제271조의10 제13항, 제17항~제20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모든 사모펀드*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, 투자목적회사 외의 법인 활용은 금지

* [현행]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

- 다만, 해외투자가 주목적인 외국법인 활용은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

-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고,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관련 규제*를 대부분 폐지

* (경영참여 관련 폐지된 규제) ① 출자금액의 50% 이상을 2년 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, ② 여유자금 운용범위 제한, ③ 파생상품 등 투자범위 제한 등

-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한 회사의 범위 및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는 투자의 범위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외국법인으로서 외국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이 주목적인 경우*를 투자목적회사 외의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

*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국내 자산이 30% 미만인 경우

- 경영참여 목적 투자로 볼 수 없는 회사의 범위를 명시
(현행 시행령 제271조의15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관)

- 유동화전문회사, 선박투자회사 등 형태는 회사이나 계속법인이 아닌 집합투자기구*는 경영참여 목적 투자대상에서 제외

* 유동화전문회사, 부동산투자회사, 선박투자회사, 문화산업전문회사

- 다른 사모펀드와의 공동운용 방법을 규정
(현행 시행령 제271조의15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내용을 이관)

○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의 범위*를 구체화

- * ①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
② 투자대상회사의 조직변경,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
③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역외 투자목적회사(Off-shore SPC)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사모펀드 육성에 기여
-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경영참여목적 투자의 대상, 他 펀드와의 공동운용 방법 등을 재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
- 그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혼란 방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15. 일반 사모펀드의 정기보고 사항 신설(안 제271조의10 제14항~제15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적격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여한 각 펀드별 정기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이 상향 입법(영 → 법)되면서,
- 법에서 정한 보고사항* 외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정기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규정하고,
 - * ①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, ② 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, ③ 금전차입 현황
- 법 개정방향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제7-41조의6제3항에서 정한 정기보고 사항을 영으로 상향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투자업규정 제7-41조의6제3항에 따른 일반 사모펀드의 분기별 보고사항*을 영에서 정하도록 함
 - * 영으로 상향 규정되는 ‘금투업규정 §7-41의6 ③ 정기 보고사항’
 - ①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 - ② 투자대상자산 현황
 - ③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
 - ④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
 - ⑤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
 - ⑥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
 - ⑦ ①~⑥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 관리방안
- 또한,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 및 증권의 차입 후 매도현황을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사모펀드의 분기별 정기 보고사항을 영에서

정함으로써 그 감독근거 명확화

-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른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정기 관리근거를 확보하여 관련 유동성위험을 사전에 확인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6. 일반 사모펀드의 수시 보고사항 추가(안 제271조의10 제16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89조제1항제2호* 및 제249조의8제5항** 개정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의 수시 보고사항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

*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항목으로 환매금지형 펀드의 만기변경 또는 만기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를 추가

**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 특례 [제237조(환매 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등)] 적용을 배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변경 또는 만기상환 거부하는 결정이 있을 시,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수시 보고사유에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변경 또는 만기상환 거부 발생 사실을 감독당국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기 조치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7.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(안 제271조의11 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249조의8제2항제5호* 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신탁업자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운용행위 감시의무를 부여하면서,

*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는 법 제247조를 적용

-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일반 사모펀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감시 대상으로 정하도록 위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반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로부터 재간접투자를 받는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가 간접투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탁업자의 운용감시 대상으로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관리·감시를 받도록 함으로써,
- 일반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사전 제거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8.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회계감사 적용 예외(안 제271조의11 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제249조의8제2항제3호* 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
 - *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는 법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
- 다만, 법 위임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회계감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자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의 자율적·효율적 운용 도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9.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보고 합리화(안 제271조의1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로 인하여,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단순 투자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,
 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(10%→400%)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전담중개업무를 이용함에 따라,
 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항목을 새로운 운용방식에 맞도록 합리화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로 단순투자 및 경영참여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,
 -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내용을 설립보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,
 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
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시 관련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제3자*의 범위를 구체화 함
 - * 업무집행사원, 신탁업자,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)
- 일반 사모펀드의 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즉시 보고사유와 일원화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립보고 시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관한 사항과,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, 금융당국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한 관리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0.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(안 제271조의14제1항, 제4항, 제5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수가 확대(49인 → 100인)되고, 투자자 수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,
- 사모펀드를 투자자 범위*에 따라 구분함으로서 법에서 ‘기관전용’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“전문투자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 구체화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복층구조의 사모펀드의 사원수 합산* 등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 방식을 구체화 함
 - * ①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10% 이상 취득, ②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0% 이상 취득(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%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)
- ‘기관전용’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함
 - ※ 단,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및 전문투자자요건을 갖춘 외국인(개인포함)의 투자는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자수 합산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서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(100인)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지하여 공모와 다른 사모펀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범위를 확정하여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 구축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1.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및 일원화(안 제271조의15, 제271조의17, 제271조의18)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모펀드의 구분을 종전 운용방법에서 투자자의 구분으로 변경하고, 기관전용 사모펀드(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)의 운용규제를 일원화(완화)함에 따라 종전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운용규제를 삭제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관전용 사모펀드(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)의 운용규제* 관련 조문 삭제
- *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 한정, 차입한도(10%), 잔여재산 운용현황 보고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운용규제를 일원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2.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정기 보고사유 신설[안 제271조의16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단순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사모펀드별 정기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이 법에 신설되고,
- 법에서 정한 보고사항* 외에 사모펀드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정기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

* ①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, ② 채무보증·담보제공 현황, ③ 금전차입 현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투자대상자산 현황,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 등 사모펀드의 리스크 관리 및 펀드 운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사항*을 영에서 정하도록 함

*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, ②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 현황, ③ 증권의 차입 후 매도 현황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방식 다양화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당국의 사모펀드 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현황파악이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3. 투자목적회사의 주주/사원, 운용방법, 자산위탁 [안 제271조의19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, 단순 투자(포트폴리오 투자) 목적의 투자목적회사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,
 -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함을 전제로 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/사원 요건, 운용방식 관련 세부사항,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위탁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및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
- 1)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주/사원요건을 마련*하고,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을 일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
- * 1) 제조업 등 영위 업자로서 2)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일반 사모펀드 집합투자업자와의 합의·계약 등에 따라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포함
- 2) 투자목적회사 재산도 사모펀드 재산 운용방법과 동일하게 운용되어야 함을 명문화
 - 레버리지 한도, 부동산 등의 처분 제한, 개인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, 규제 회피 목적의 투자목적회사 외 법인 설립 금지, 경영참여 방식 운용시 15년 내 해당 지분증권 처분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3) 경영 참여를 위한 투자비율 및 잔여재산의 증권 운용 비율 등의 산정방법, 6개월 이상 지분 소유 의무 및 경영 참여기준 미달성시 처분 의무의 예외 신청절차·서식 등 관련 규정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범위, 운용 방법, 자산 위탁 주체 등이 사모펀드 일원화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되어, 사모펀드의 효율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 기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4. 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운용방법 제한 [안 제271조의2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, 제7항, 제8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은행·보험 등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(GP) 등록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
 - 해당 펀드의 운용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
- 금융투자업 인가 정책상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는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,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운용방법*을 유지

*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로 한정, 차입 규제, 파생상품투자 제한 등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(이하, “금융회사”) 중에서 금융투자업자,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*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,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함
- * 은행법, 한국산업은행법, 중소기업은행법, 한국수출입은행법, 보험업법,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(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업무집행사원은 제외), 신용보증기금법, 기술보증기금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새마을금고법, 신용정보법, 자산관리공사법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14개 법령(영 제271조의2제2항 본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은행, 보험 등의 과도한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예금자 및 보험 가입자를 보호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25.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[안 제271조의20제9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의 겹치시 발생 가능한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,
-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요건 강화에 대응하여,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을 제한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·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겹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,
-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(요건 미충족자)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한 금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6.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강화 등(안 제271조의2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목적 외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,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인력 요건을 규정*할 필요

* 현재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운용인력 요건 없음

- 업무집행사원 등록 및 등록 후의 변경사항 보고 또는 재무사항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업무집행사원 등록 시의 ‘투자운용전문인력요건’을 금융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*

*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력요건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 중

-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 변경 시 경미한 경우*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,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

* ①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 명령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
② 단순 자구수정 등

- 재무제표 제출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,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시 기재하여야 하는 업무집행사원의 관한 사항이 보고된 것으로 간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력요건을 구체화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재무적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의 펀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,
- 변경등록 및 재무제표 제출의무 부과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경영

사항 및 재무적 이슈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27.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특례(안 제271조의25 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전업그룹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 중 일부 사항*을 면제하고 있으나,
 - *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유한책임 사원의 ① 명칭, 사업내용, 재무현황 등, ② 출자지분 현황, ③ 출자지분 1% 이상 변동시 그 변동내용 등
- '17.4월 공정거래법 개정* 및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
 - 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5조원→10조원)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(5조원) 신설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면서,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주력그룹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*는,
 - * 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, 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우
- 현재와 동일한 공시의무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현행과 동일하게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면제하여 사모펀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